

전남 의과대학 내년 개교 ‘무산’...의료계 대타협 관건

김영록 “전남 의대 내년 어려울 듯...2027년 개교 목표”

대선 공약에 의대 설립 반영... “지역 균형발전 개헌”

의정 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회기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내년 신설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후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전략수정에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14일,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첫 기자회견회에서 도정 현안인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의대 정원 3068명 동결(회귀) 방침에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2026학년도 신설과 첫

정원 배정은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가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내 2026학년도 대입 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중 전형계획에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남 의대 첫 신입생 배정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의대 신설 예비인증도 최소 1년 이상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신 “2027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 지역별로 필요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인력 수급을 결정하고 관련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정원 동결과 별개로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의 대타협으로 해결하되, 국립 의대 신설은 그와 별개로 의료 취약지 의료 완결성 차원에서 대학 신설과 증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두 트랙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노인·장애인 비율 전국 1위, 의사 없는 유인도 전국 최다, 지방의료원 대거 휴진, 공중보건의 감

소,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 전국 최고, 긴급환자 골든타임 등 각종 지표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정부도 이같은 분위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새 정부에서도 추계위를 통해 2027학년도에 신설과 신입생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고위공직자와 정부 부처 국·과장에 호남 인재 발탁과 등용이 절실하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김 호 기자



4월 지리산 노고단 덮은 눈

14일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 눈이 내리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세월호 참사 원인...사법부 “외력 없었다”

10년 만에 결론...조타기 비정상적 작동·과적에 선체 전복

탑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체 복원성 불량 등 내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법부의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타당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배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목포해심)의 여

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목포해심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 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울 것으로 봤다.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타

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갔으며, 이후 급선회에 따른 급경사로 화물이 쏟아지고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고 봤다. 세월호는 50도까지 기울다 1시간 40여분 만에 침몰했다.

이 같은 침몰 원인에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이 떨어진 점이 있다고 봤다. 선체 복원성 확보를 위해 신고 있던 평형수량도 복원성계산서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한 결과 필요했던 1566t중 절반

수준인 800여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8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낸 내인설을 다룬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침몰 과정에서 물체와의 충돌 등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목포해심은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위와 같은 선외 과정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 호 기자

민주당 호남 권리당원 전체 35%...경선 표심 향방 관심

권리당원·일반국민 투표 50%...권리당원 38만명 집계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접합씩 반영한 21대 대선 경선투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호남의 권리당원이 전체 35%를 차지해 당원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은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 28명 중 대다수가 친명(친이 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사실상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키로 하고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안에 권리당원 투표를 통과하면 12개월 전 당원으로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약 110만명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 등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뒤 최종 권리당원 유권자를 확정한다.

호남이 민주당의 본산이자 텃밭인 만큼 광주와 전남, 전북의 권리당원 수는 타 지역을 압도한다.

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권리당원 수는 광주 7만명, 전남 15만명, 전북 16만명 가량으로 대략 38만명에 달한다. 이는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110만명의 35%다.

지난해 4월1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호남지역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친명으로 교체되거나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최근까지 ‘일국체제’로 당권을 장악한 데다 친명계 지역 국회의원들이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경선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만큼 100% 국민 투표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대선 기간 여의도에 집무실...공약 반영 총력

강기정 시장 서울 활동...‘AI중심도시·달빛철도’ 건의

광주시가 대통령 선거기간에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 조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을 정부추가경정예산안과 대선공약 등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일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한다.

강기정 시장은 14일 오전 광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의도 집무실은 광주시의 인공지능(AI) 도시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형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대선공약이 반영되도록 각 당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시장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의도 집무실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주 16일과 17일에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

개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AI 도시 구축’과 ‘초거대컴퓨팅AI센터 설치’ 등을 요구한다.

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산추모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주 23일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멈춰 있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구축과 관련해 기재부 등을 방문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형 설립’,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광주 발전 공약을 여의도 집무실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12·3비상계엄을 막은 정신이 5·18민주화운동이었음을 강조하며 대선에 출마한 후

보들에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강 시장은 “대선 기간에 지자체장은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5년, 10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이 그랬다”며 “16일 수요일부터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광주 현안에 담긴 공약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민의 행복은

아주 보통의 하루로부터!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위한 **아·보·하** 정책

01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 주는 광주G-패스 (광주형 대중 교통비 지원)	06 호출료 무료 062-525-5555 어르신 전용 콜택시	11 청소·정리정돈 등 1인당 20만 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02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07 실용적인 결혼문화를 위한 시청사 예식공간 개방	11 아동당 연 200시간 간병·종합 돌봄 지원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03 건기 좋은 광주천변 계절꽃 산책로 조성	08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단 운영	11 맞벌이·다자녀가정 돌봄 수당 20만 원 손재녀돌봄 지원사업
04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 단축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09 산단 근로자 건강 지원 반값 아침 한 끼	11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05 재난·사고 시 생활 안정을 위한 광주시민안전보험 운영	10 군 복무 시 자동차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15 직장맘 꾸러미 제공 빛나는 맘편한 패키지 지원